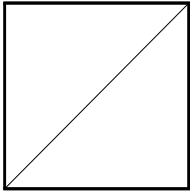


3년 비공개



의안번호	제 303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10. 30. (제 19 차)	

(주)씨에스에이코스믹의 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출자	위원장 손병두
제출 연월일	2019. 10. 30.

1. 의결주문

(주)씨에스에이코스믹의 제30기 반기(2018.1.1.~2018.6.30.)의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씨에스에이코스믹의 제30기 반기(2018.1.1.~2018.6.30.)의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 허위매출 계상 ('18년 반기, 5,291백만원)
조치 내용 *1,*2	○ 과징금(318.6백만원) ○ 담당임원(공시담당임원 000) 해임권고 ○ 검찰통보 ^{*3} (회사, 대표이사 000, 공시담당임원 000)

※ 행위 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높아 행위 당시 양정기준을 적용 (현행 양정기준 적용시 '고의 III→II 단계')

*1 동기판단 : **고의**

- 회사의 중국사업본부장 000은 회사에서 영업담당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000, 000이 퇴사하여 2018.5월 (주)000000을 설립하자, 중국 광군제를 겨냥하여 '매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000·000은 이와 같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8.6.29. 2,227백만원의 거래를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000과 000, 000은 출고 시점까지 창고가 없더라도 예정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 또한, 회사는 (주)000000에 2018.6.29. 3,063백만원의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단가 문제로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물류센터장 000으로 하여금 (주)000000에 동일한 금액, 품목의 출고처리를 물류시스템에 해 놓을 것을 지시하였음

- 물류센터장 000은 회사 지시에 따라 (주)000000 및 (주)000000에 대하여 6.29. 물류시스템 상으로만 출고처리를 하였고, 동 거래에 관하여는 실제 출고가 없을 것을 본사로부터 미리 지시받아, 운송업체에 배차신청도 하지 않았음
- 이후, 000은 경영지원본부장 000으로부터 배송기록 등 관련 서류를 6.29. 실제 물품이 출고된 것처럼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배송업체인 (주)000 대표이사인 000에게 6.29. (주)000000 및 (주)000000에 11톤 차량 23대, 15톤 차량 2대가 실제 물품을 운송한 것처럼 2018.6월 운송거래 정산 명세서를 재작성 할 것을 요구하여 운송거래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2018.6.29. 실제 물품이 인도된 것처럼 ‘출고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대방 회사에 전달하였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8.6.29. 회사는 (주)000000 및 (주)000000에 각각 2,227백만원, 3,064백만원의 매출을 인식하였음
- 반기검토 기간 중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운송거래내역, 입고증 등을 제출하였고, 공시담당임원 000, CFO 000, 중국사업본부장 000 등은 외부감사인과의 본건 매출에 관한 면담에서 본건 매출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허위진술을 하였음
- 본건 매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CCTV 영상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음

⇒ (舊양정기준) 이는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증빙자료 등을 위·변조 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로 보아 ‘고의’로 판단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1.가.1)]

*2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 회사는 조사착수('19.2.19)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은 날('19.2.19)로부터 1개월 이내인 '19.3.18. 위법행위를 수정·공시하였으므로 1단계 감경을 적용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2)]
-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물류센터 CCTV영상을 삭제하고, 출고전표를 조작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매출채권 회수를 가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1단계 가중 [舊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2.가.3)]

*3 대표이사 000, 공시담당임원 000 등은 제30기 반기보고서에 대한 회계분식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바, ‘**검찰통보**’ 조치

4. 참고사항

가. 제9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19.7.18.)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

(주)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씨에스에이코스믹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 00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의하여

- (주)씨에스에이코스믹에 과징금 318,600,000원을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에 의하여

- (주)씨에스에이코스믹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공시담당임원 000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하며,
- (주)씨에스에이코스믹, 대표이사 000, 공시담당임원 000을 각각 검찰에 통보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씨에스에이코스믹은 제30기 반기(2018.1.1.~2018.6.30.)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허위 매출 계상(제30기 반기, 5,291백만원)
- 회사는 (주)OOOOOOO 및 (주)OOOOOOO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5,291백만원의 허위 매출 및 2,647백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43조 등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17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의 범위에서 증권발행제한 ②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③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④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⑤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문단 15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문단 31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 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3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같음

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나. 가목 외의 법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권한

② <생략>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4.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고발 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 3. <생 략>

*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 ~ 4. <생 략>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 다. <생 략>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2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상대방(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이 기준서의 적용 목적상 그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약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1)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고객에게 이전하지 않았다.

(2)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아직 받지 않았고 아직 받을 권리도 없다.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87	02-3145-7308